

에너지빈곤 32가구에
방한용품 전달

노사 '온기나눔' 캠페인 전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행복한어르신복지관과 함께 ‘21년 따뜻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노사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공단 임직원 약 25여명이 참여해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 가구 약 32곳에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워밍(Warm)박스(전기요, 이불 등)와 방역마스크를 전달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코로나 지친 소상공인에 희망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래피 작품 40여점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소진공은 이밖에도 지역 사회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따뜻한 온기나눔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文정부, 李요구 거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 “공시가 현실화 계획 그대로 추진”… 이재명 요구 거부

이재명, 2년 전엔 “공시가 현실화해야” 주장… “선거 다가오자 입장 바꿔”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후보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의 70%에 그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제안을 당정이 거부한 것이다.

다만 내년도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집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는 그동안 강조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 다주택자와 관련 “비필수 부동산과 투기에 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제시하면서 당내에서도 잡음도 일었다. 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시장경제DB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를 수 있다면 정치란 참편한 일일 것”이라며 “공약의 중심이 국민이 아닌 자신에 맞춰져 있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아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성 기자 jslee075@newdaily.co.kr

올해 집값 상승률 15% 육박… IMF 이후 ‘최고’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14.97%,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두 배 수준, 빌라도 작년 상회

올 하반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연간 상승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폭등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공언한 것과 달리,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14.9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2001년은 줄어든 주택 공급과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9.87%를 기록한데 이어 이듬해인 2002년에는 16.43%로 상승폭

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집값 상승률도 2002년과 유사하다. 2002년 당시 연초에 집값이 월 2%대의 급등세를 보였다면 올해는 집값이 5월(0.96%)과 12월(0.50%)을 제외하고 매달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20.18% 올라 지난해 상승률(9.62%)의 2.1배에 달했다.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가격 상승률은 올해 6.99%로, 작년 상승률(6.47%)을 소폭 상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 작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지속,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 가격 역시 18.61% 올라 2006년(20.3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12.50%)과 경기(22.49%)는 2006년 이후



서울시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23.75%)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25.42% 올라 2006년 상승률(24.61%)을 뛰어넘었다. 2006년은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이른바 ‘버블세븐’(강남권 3구·목동·경기 분당·평촌·용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다. 지난해(12.51%)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인천에 집중됐다. 경기 오산(49.30%)과 시흥(43.11%)은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0%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두천(39.26%), 안성(38.52%), 의왕(37.43%), 평택(36.61%), 의정부(36.48%), 안산(34.60%) 등도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韓 게임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올해 매출 20조 넘을 듯

한국 게임 산업의 2020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매출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보다 21.3% 증가한 18조 8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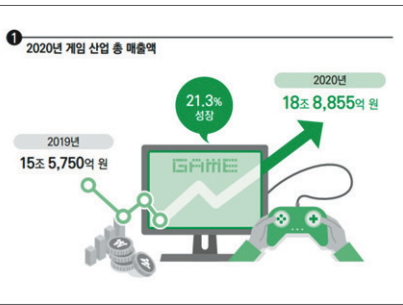
콘진원은 업계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게임 상장사들의 올해 공시자료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증장기 전망치 연구를 토대로 2021년 매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모바일게임은 10조 8311억 원으로 전체 게임산업 매출액의 57.4%를 차지했으며, PC게임이 4조 9012억 원(점유율 26.0%), 콘솔게임이 1조 925억 원(5.8%), 아케이드 게임이 2272억 원(1.2%)을 각각 기록했다.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이 각각 39.9%와 57.3% 성장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한 반면, PC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전년 대비 각각 2.0%, 1.6%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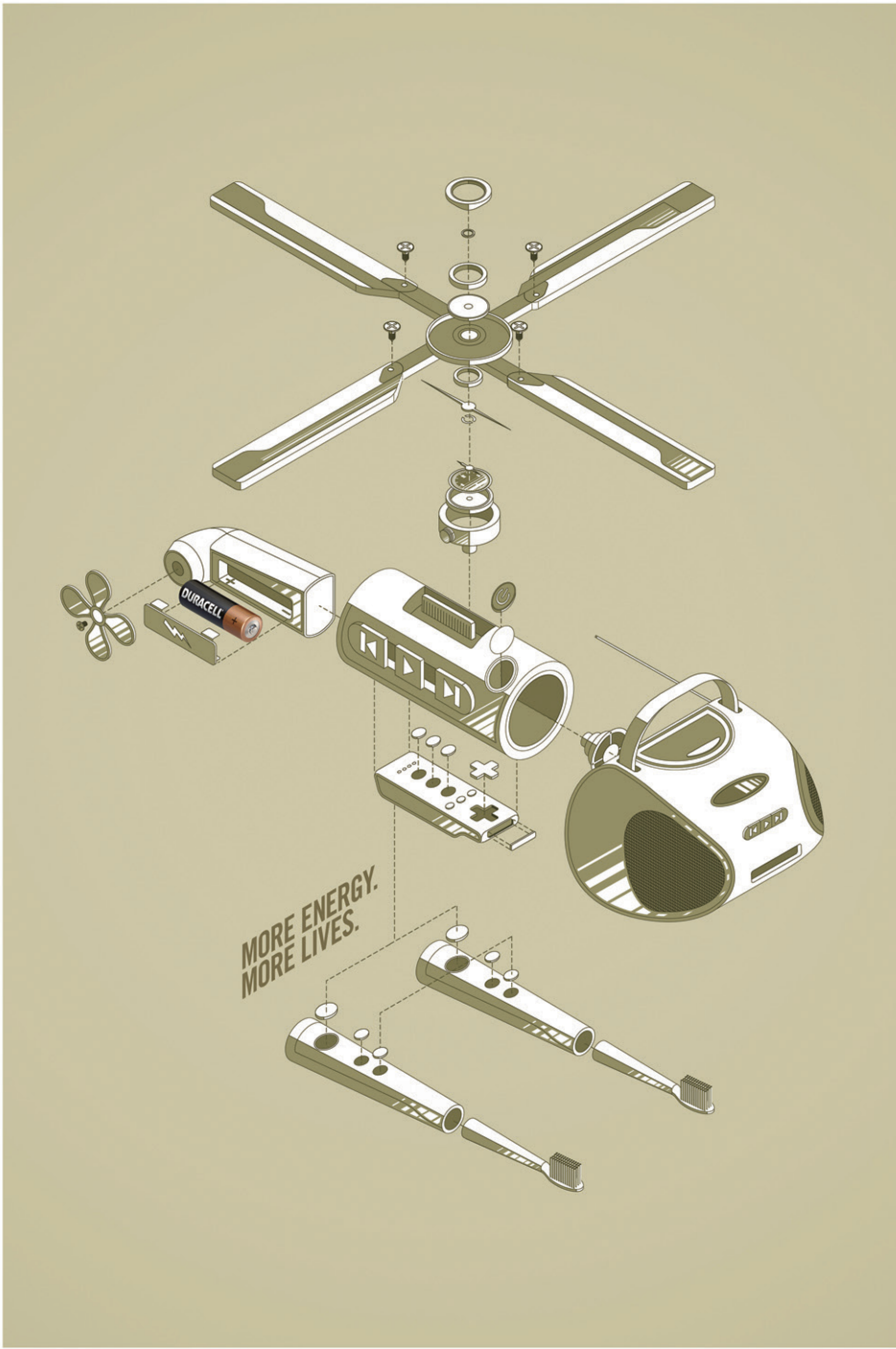


2020년 게임 산업 총 매출액,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대비 11.7% 증가한 2096억 5800만 달러(한화 약 250조 원)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6.9%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해 전년대 한 계단 상승했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Helicopter
Client: Duracell
Agency: PUBLICIS LIMA

헬리콥터
듀라셀
퍼블리시스 리마